

“반도체 호황 세수, 미래 투자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당·정·청 ‘3대 메가프로젝트’ 빠른 입법·예산 지원 필요성 강조

민주, ‘지원 TF’ 위원회 격상 검토
지역별 클러스터로 첨단산업 육성

당·정·청(여당·정부·대통령실)이 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관련, 입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태스크포스)를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챙기도록 위원회로 격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대통령실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국정 과제 완수를 위한 하반기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당정협의회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당·정·청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시작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석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 바꿀 수 있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좋은 계획도 투자 시기를 놓치면 성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속도가 곧 경쟁력이고 작기 대응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TF의 위원회

격상 문제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강훈식 실장은 “전세계가 AI(인공지능) 혁명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지금,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년 후 미래를 결정할 새 성장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민간 합동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는 동일 산업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기

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텍사스의 반도체 벨트처럼 우리도 수도권외의 한계를 넘어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반도체 외 바이오, 항공 등 첨단 산업이 지방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계획을 강구해준다면, 중앙정부가 적극 호응해 지방주도성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쓰면 안 된다.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대한민국을 또 다른 도약으로 이끌 국가미래전략으로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퍼지컬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서 향후 30년의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광장도 도전적 과제”라며 “과거 고속도로, 초고속통신망이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낸 것처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속도가 불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새 성장 시대를 열어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th7285@metroseoul.co.kr



metro

허위정보 5배 배상... 정치권 ‘입틀막’ 공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일 시행

민주 “책임 강화” vs 국힘 “표현 위축”

고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7일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당한 비판까지 허위조작 정보로 몰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에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오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온라인 상의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통과 여론 왜곡을 근절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홍위와 패러디’를 제외한,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금지된다. 차별과 증오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도 규제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처벌규정의 경우, 언론사 등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손해 액수 산정이 어려울 경우 5000만원 내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에 법적 책임도 부과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절차 마련, 게시물 삭제 및 접근 제한 조치, 자체 검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이 다가오자 이를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입틀막법’으로 표현하며 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는 모습. /뉴시스

슈를 키워가는 모습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 범위를 넓혀 놓은 만큼, 국민 누구나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를 비판할 글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글도,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글조차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플랫폼에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은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법원의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고, 적법한 비판과 토론까지 함께 사라지는 ‘과잉 삭제’와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반대해 직접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검열의 위험성을 다루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미국은 이미 금융·비자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며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

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은 ‘7·7(시행일) 입틀막법’이라고 표현하며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무책임한 과다 조차 표현의 자유라 우기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판이 제기되자 여론 조작 차단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진보정당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진보당의 경우 지난해 개정안 통과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언론 통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개정안은 당 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서 주도해 마련됐는데, 특위 간사를 맡았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법원이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라며 “내용에 거짓이 들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누군가 정신적·직접적 손해를 입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언론사는 특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과 똑같다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민석 출사표... 민주당 당권 경쟁 본격화

오늘 광주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전국대의원대회) 출마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될 예정이다. 당원 ‘1인 1표제’가 도입되는 첫 선거인 만큼, 저마다 경쟁적으로 민주당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 선거 시작 전부터 열기가 한층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김민석 전 총리 측은 5일 공지를 통해 김 전 총리가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 후 전일빌딩 245 9층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공지했다. 전일빌딩 245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곳으로,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과거 전일빌딩이라는 광주의 랜드마크격 건물이었으나, 이를 리모델링해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전일빌딩 245 지상 9층엔 5·18 전시관과 5·18 영사실이 있다.

김 전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1이 모여있는 호남 당심에 직접 호소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광주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호남반도체 웹 부지로 주요하게 거론되는 광주 군

공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김 전 총리는 첫 외부일정으로 충북 청주를 방문해 SK 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방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부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의 가중치를 폐지하고 모든 당원에게 동일한 표의 가치를 부여하는 ‘당원 1인 1표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호남 민심을 공략해야 선거 승리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청래 전 대표는 민주당의 ‘큰 어른’이었던 정치인을 재조명하며 당심에 호소하고 있는데, 지난 4일엔 전남 목포 하의도 소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5일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참배하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연수구갑에서 승리해 22대 국회내 최다선(6선)으로 국회에 돌아온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송 의원은 박찬대 인천시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와 정부 내 고위 인사를 만난 것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은 자신의 고향 전남 고흥을 소개하며 이재명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의지와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태홍 기자



정청래(왼쪽부터), 송영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하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